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6. 25(화) / 총 8매(본문8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윤영진 • ☎ (044)201-3998
	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일하, 사무관 배기훈 • ☎ (044)201-4007
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완국, 사무관 이양구 • ☎ (044)201-4018
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호섭, 사무관 성인영 • ☎ (044)215-4572
※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8페이지 참조			
보 도 일 시		2019년 6월 26일(수) 경제활력대책회의 종료 시 09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「물류산업 혁신방안」 발표

- 산업 지원체계 · 성장기반 · 시장질서 혁신 중점추진 -

【 물류산업 혁신방안 주요 골자 】

- ① (산업 지원체계 혁신) 택배업, 배송대행업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.제도 정비, 전통물류산업 활력제고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
- ② (산업 성장기반 혁신)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,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, 일자리 매칭 ·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
- ③ (시장질서 혁신) 위수탁 제도(지입제), 다단계 관행,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

□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6일 (수) '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'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'물류산업 혁신방안'을 발표하였다.

□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,

-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.

□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**핵심산업**으로 운송, 보관,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으며,

○ 최근 소비자물류*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.

* 택배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('08~'17): 9.1% ↑ (2.4→ 5.2조원)

□ 반면, 우리 물류산업은 **낡은 제도¹⁾와 불투명한 시장구조²⁾, 인프라 부족³⁾**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,

1) 화물차 중심의 제도, 2) 지입·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, 3) 물류시설 공급부족

○ 지원체계, 성장기반,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**전면적인 혁신방안**을 마련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산업 지원체계 혁신 】

(1)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

□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**택배와 배송대행업**에 대한 **법적 근거***를 마련한다.

* (택배업) 자본금, 집하분류시설, 화물차, 차량관리전산망 등→ 등록제
(배송대행업) 다양한 서비스 형태, 창업편의 등 고려→ 인증제(사업자 선택)

○ 아울러 **택배기업**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**각종 규제***를 최대한 배제하여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,

* 직접운송의무제·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,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 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(1년 단위) 면제 검토

○ **배송대행 인증기업**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(컨설팅 지원 등)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특히,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**택배기사, 택배분류 노동자,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**도 추진된다

○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**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**(현재는 관행상 1년)하는 한편,

○ 택배사·배송대행사의 **안전관리 준수 의무***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**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**해 나간다.

* 안전교육 시행, 작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,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치

□ 이를 위해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는 업계·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의견수렴을 거쳐 (가칭)「**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**」 제정, **화물법 개정**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

(2)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

□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**전통물류산업**(기업간 물류)의 **활성화**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.

○ **대·폐차 톤급범위 확대**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,

* 개인업종 차량 톤급 확대: (현행) 1~5톤 → (개선) 1~16톤

○ **화물차 가맹사업*** 활성화를 위해 **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**을 대폭 완화(차량 500 → 50대 이상)하면서 **화물면허 양도기준****도 개선한다.

* 운송사,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받고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

** 양도대상 확대: (현행) 운송사업자 → (개선) 운송사업자 + 위수탁 차주

□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,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**최소운송의무제 처분***을 완화하고,

*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%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: 위반시마다 (현행) 30일 > 60일 운행정지 > 감차 → (개선) 10일 > 20일 > 30일 운행정지

○ 중소기업·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**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***도 합리적으로 조정할(매출액 비중 축소 등) 계획이다.

* 화물운송, 물류시설,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, 인증 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 부여

(3)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

-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,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-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, 정책금융 확대,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.

【 산업 성장기반 혁신 】

(1) 물류시설 공급 확충

-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여, 도심 내·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.
-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,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 시설을 확보(도시·군계획반영)토록 하면서,
-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*할 계획이다.
- * (현행)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→ (개선)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입지 허용
-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~3개소를 대도시권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선정·발표한다.
- * 국토부, 지자체, 택배기업 등으로 7월중 후보지 조사를 위한 T/F 구성 예정
-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 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.
- 물류시설(총 단지면적의 60% 이상) 인정기준 완화*,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**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,
- * 물류기업의 업무·교육·연구시설(R&D 센터) 등도 물류시설로 확대인정
- **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 개발시(지분 50% 이상) 사업능력 심사 면제
- 중소기업·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(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부지에 시범사업 추진),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.

- 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**교통·환경 개선사업**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.

* (가칭) 물류단지 집적지구 교통·환경 정비사업(교통시설 개선,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)→ 물류시설법 개정추진

(2) 첨단기술 투자 강화

-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, 첨단기술·장비에 대한 **민간투자를 유도**하기 위해 **‘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*’**를 도입하고,

* 첨단 물류설비·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효율·안전성·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

- 자율주행 화물차·IoT 콜드체인 온·습도 관리기술 등 **첨단물류기술 개발**에 **‘27년까지 약 2,000억원을 투자*해 나갈 계획**이다.

* '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, 통과 시 본사업 추진('21~'27)

-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**친환경 화물차**로 전환하기 위한 **중장기 로드맵**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('20)하면서,

* '23.4월부터 택배용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(대기관리권역법)

- **친환경 화물차 전환** 촉진을 위한 **인센티브***, 수소·전기 충전소 설치지원, **군집주행**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.

* 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 허용

(3)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

- **‘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(nlic.go.kr)’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***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**융합인력 양성****을 추진한다.

* (종전) 수기입력→ (개선) 민간 일자리포털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

** 유라시아 철도연결 대비 러시아어 구사자, 물류현장 안전 전문가 등 양성

- 아울러 유통·ICT 등 **산업간의 융·복합 추세**를 고려하여, 신기술 기반의 **혁신물류 스타트업**을 지속적으로 발굴·지원해 나간다.

* 입주공간, 판로개척, 마케팅 지원, 자금투자(물류스타트업 투자펀드) 등

【 시장질서 혁신 】

(1) 위수탁제도*(지입제) 개선

*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·처리('97년 합법화,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음)

□ 부당한 금전요구*, 지입사기**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(지입관련 수입외 매출이 없는 회사)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,

* 번호판 권리금, 보험갱신수수료,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 갈취

**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을 중단

□ 업계,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Zero-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.

(2)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

□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,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* 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·감독을 내실화**하고,

* 예: (운송) 50→('20) 55→('22) 60%, (운송+주선 겸업) 30→('20) 35→('22) 40%

** 안전운임신고센터 확충, 화물정보망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

□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·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.

【 향후 추진계획 】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「물류산업 혁신방안」을 통해,

○ AI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,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,

○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1. 산업 지원체계 혁신	
1-1.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제정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	국토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☎044-201-3996)
1-2.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소운송의무 개선방안 마련 	국토부 물류산업과 송태호 사무관(☎044-201-401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운송사업 톤금규제 완화 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송가맹사업 차량 허가대수 기준 완화 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송사업 양수 대상 확대 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1-3.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외투자 타당성조사 지원 	국토부 물류정책과 윤영진 사무관(☎044-201-399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외진출 정책금융자금 지원 강화 	국토부 물류정책과 윤영진 사무관(☎044-201-3998)
2. 산업 성장기반 혁신	
2-1. 물류시설 공급 확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 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GB 행위제한 일부 완화 	국토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(☎044-201-374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재생 연계 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세기업 전용 천안 물류단지 개발 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물류집적지구 교통·환경 정비제도 도입 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------	-----------

2-2. 첨단기술 투자 강화	
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■ 공공 R&D 투자 강화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■ 전자인수증 표준화	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044-201-4007)
2-3.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	
■ 융합형 물류인력 양성사업 추진	국토부 물류정책과 윤영진 사무관(☎044-201-3998)
■ 물류창업 캠퍼스 구축	국토부 물류정책과 윤영진 사무관(☎044-201-3998)
■ 물류 스타트업 발굴·지원, 투자연계	국토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☎044-201-3996)
3. 시장질서 혁신	
3-1. 위수탁제도(지입제) 개선	
■ 지입제 개선 로드맵 마련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■ 지입차주 권익 강화방안 마련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3-2. 다단계 관행 근절	
■ 직접운송 의무비율 상향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■ 화물정보망 불법행위 감시체계 구축	국토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(☎044-201-4018)
3-3. 대형물류사 불공정 관행 차단	
■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방안 마련	국토부 물류산업과 최은지 사무관(☎044-201-4017)



기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(☎ 044-201-40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